

# 주요 정책의 쟁점

(1997. 9. 26~10. 17)

일자	정책	주된 내용	수급 의견	보완 의견
9.26	1998년 예산안 확정	· 1998년 예산, 올해보다 5.8% 증가한 75조 6,000억 원 편성 · 경유와 등유에 대한 탄력세율 30% 인상, 교육세 10% 인상	· 세수 부족에 대비한 긴축 재정 · 국민 생활 지표 향상	· 내년 경제 회복 국면 반영 미흡 · 각종 공공 요금 인상 불가피 · 조세편의주의적 교육세 인상
9.28	택지 개발 민자 유치 방안	· 공공 기관 시행 택지 개발 사업에 민자 참여 허용 · 민간 기업이 택지 조성 사업비 부담시 조성된 택지와 개발권 부여	· 택지 개발 용이로 인한 택지 공급 증가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	· 무분별한 택지 개발로 인한 비효율 발생 가능성
10.1	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	·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· 9만 평 이하 관광지 지자체의 승인만으로 개발 가능	·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공간의 효율적 이용	·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 실종 · 인구 집중 유발
10.7	통상 관련 조직 및 기능 통합 추진	· 가칭 한국무역대대표부(KTR) 설립 추진	·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외 통상 관련 조직 및 기능 통합으로 공세적 통상 정책 가능	· 관련 부처의 이해 관계 조정이 급선무
10.11	각종 영향평가제 통합 방안	· 1998년 7월까지 다양한 평가 제도 통합 · 2000년 이후 개별적인 영향평가 제도 폐지하고 일원화	·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중복 실시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 경감	· 각종 영향 평가 일원화의 기술적 문제 존재 · 각 부처간의 업무 협조 필요
10.16	전기통신법 시행령	· 전국 전화 사업자의 소유와 경영 분리 · 인터넷 전화 등 새로운 통신 서비스 사업의 진입 장벽 낮춤	· 통신업체의 공익성 보장 · 통신 요금의 자율화로 소비자 만족 증대	· 주주 권한의 지나친 제한 · 요금 인가 고수로 요금 자율화 기초의 일관성 상실
10.17	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안	· 기업의 해외 금융업 진출 허용 · 시설재 도입용 차관 한도 폐지 · 외화 대출 채권의 해외 매매 자유화 · DR 발행 자금의 사용 용도 자유화	· 기업들의 외화 접근 용이로 자금 조달에 도움 · 수출 촉진에 도움	· 통화 증발 우려 · 무분별한 외화 유입, 핫머니의 국내 외환 시장 교란 가능성 증대 · 자금 추적의 어려움으로 감독 당국의 사후 관리 부담 가중